금남로에서

김 동 영

광주시의회 '추락' 어디까지

광주시의회 의원들의 자질문제가 또 도마에 올랐다. 광주시의회는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 인턴보좌관제 예산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장에서 의원들끼리 주먹싸움을 벌였는가 하면 일부 의원은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해 공무원 노조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흔히 싹수가 노랗다고 한다. 광주시의회의 모습이 그 꼴이다. 의원 19명 가운데 18명이 민주당 소속인 시의회는 지난 7월 출범 당시부터 주류와 비주류로 갈려 '집안싸움'을 벌였다. 변칙적인 의장단 선출은 비주류측의 반발에 부딪쳐 법정싸움으로 번졌고 시의회는 2개월여동안 표류했다. 이후에도 사사건건 충돌을 빚으며 시민들을 실망시켰다.

'집안싸움'에 자질론 시비

지난 10월에는 광주시가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시의회가 존립기반을 위협받은 것이다. 집행부의 사과로 사태는 진정되었지만 시의회의 위상과 시의원의 자질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다.

시의회의 독선과 오만은 이번 인턴보좌관제 예산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들이 물리력까지 동원하며 저지했지만 시의회는 이를 무시한 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자칫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고 비난만 뒤집어 쓰게 됐다. 오죽하면 광주시공무원노조가 의원평가제를 도입,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겠다고 나서겠는가. 공무원노조는 19일 집행부와 의회의 건전한 견제와 감시, 균형 등을 통해 시민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연대, 의정활동을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인턴보좌관제는 현실상 문제가 많다. 행정자치부는 인턴보좌관제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며 전국 시·도에 예산편성 금지 지침을 내렸다. 지침을 어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선 감사를 실시해 관련자들을 징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실효성도 의문이다. 광주시의회는 예산을 심의하면서 박광태 시장의 의견을 물었으나 답변은 부정적이었다. 박 시장은 "유급 인턴보좌관제를 도입하려는 의회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정부와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다른 자치단체가 도입 계획을 자진 철회하고 있는 마당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이 동의하지 않으면 인턴 보좌관제는 무산될 수밖에 없다. 설사 박 시장이 동의하더라도 행정자치부가 반대하고 있는 이상 예산 집행은 불가능하다.

다른 시·도의회의 움직임도 불리하다. 전남도의회를 비롯 전북·충북도의회 등은 시민단체의 반발과 현실적 여건 등을 들어 인턴보좌관제 도입을 유보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의회가 인턴보좌관제를 고집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광주시의회의 인턴보좌관제 관련 예산은 월 90만원의 봉급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 등 1억7천640여만원이다. 보좌관들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18명에게 1명씩 고용돼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등에 대한 자료 수집과 정리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재정적 부담도 문제지만 급여와 일용직 등의 여건상 전문성을 갖춘 고급인력은 기대하기 어렵다. 정책 생산 등 의정활동 보좌보다는 의원 개인의 '심부름 보좌'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인턴보좌관제 유보해야

광주시도 책임을 져야 한다. 집행부가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어 인턴보좌관제 예산은 광주시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집행부가 의회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묵인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배경이다. 일부 의원들은 "집행부가 동의해 주기로 했다가 나중에 태도를 바꿔 의회만 난처해졌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시의회는 더 이상 인턴보좌관제를 고집해선 안 된다. 보좌관제가 꼭 필요하다면 시민공감대부터 형성하고 법률 개정운동을 벌여 위법 시비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의원들도 처신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해선 의원들의 자질 논쟁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하지 않는가.

〈논설실장〉 dykim@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옥 영 석

입맛이 그리 까다롭진 않지만 식탐이 많은 나는 식탁에서 이런저런 주문이 많은 편이다. 누구네 김치가 잘 익었기에 물어보니 멸치젓을 많이 넣었다거나, 고등어조림에는 역시 감자보다 무가 잘 어울린다는 식이다. 육류보다는 해물을 좋아하고 술 한 잔 마셨던 다음 날엔 콩나물이나 북엇국을 먹었으면 좋으련만 오이냉채나 카레를 내와 신경전을 벌이기도 여러 번이었다.

지나고 보면 "남자가 좀스럽게 식탁에서…"하는 생각도 들지만 성에 차지 않는 밥상을 받고 보면 아직도 남편식성을 모르나 하는 생각에 꼭 후회하게 될 한마디를 참지 못했다. "동태에는 쑥갓을 올려야 보기도 맛도 제격이지, 김치찌개는 역시 돼지비계가 꼭 들어가야 돼" 등등.

김장 하던 날

기왕이면 맛있게 해 보자는 충심에서 하는 말이건만 아내에겐 여간 스트레스가 아닌 모양이다. 그래서인지 시집 온 지 10년이 훌쩍 넘었건만 김장을 하려 들지 않았다. 때로 "언제까지 얻어만 먹고 살 거냐?"며 비아냥거리기도 했지만 나 역시 검증되지 않은 아내의 김치보다 한결같은 맛이 나는 처갓집 김치나 어머니의 김장김치에 인이 박혀 모험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말농장을 하다 보니 올해 김장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올 가을에는 옆집에서 권한다고 김장배추를 70여 포기나 심었던 탓이다. 그런데 뒤늦게 심기도 했거니와 가을 한 달이 넘게 가물었던 터라, 배추가 속이 차지 않아 애를 먹였다. 아무리 선 농사꾼이지었더라도 속이 반은 들어차야 선심이라도 쓸 터인데 그것도 배추라고 주었다간 욕이나 먹기 십상일 것이었다.

대학입시 날이 추운 것처럼 어김없이 추위가 엄습하던 주말, 굴은 큰 것보다는 작은 것을 사야하고 생새우는 잘 갈아서 넣어야 한다는 이집 저집 노하우를 적어가며 수선을 떨었다. 속이야 비긴 했지만 나무젓가락으로 벌레를 잡아가며 기른 배추라 맛은 틀림없으리라는 기대로 속을 가르고 천일염에 하룻밤을 재웠다. 마늘 한 됫박 까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렇다 치고, 손은 왜 그리 얼얼한지, 대충 비비기만 해도 될 것 같은 양념 버무리기도 허리 꽤나 아픈 노동이었다.

어쨌든 그 수선을 떨며 담았던 김치는 짜다는 평이 많기는 하지만 내게는 어느 반찬보다 맛있게만 느껴진다.

올 해에는 무 배추 모두 재배면적이 늘었고 태풍이나 호우피해가 없어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고 생산원가도 건지지 못한 농가에서는 산지폐기에 나섰다고 한다. 그런데도 중국산 배추 수입량이 갑절로 늘어나 배추가격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치기로 김치수입액이 수출액을 초과하는 사상 초유의 무역적자라니 종주국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따름이다. 각종 성인병이며 AI예방과 치료에 좋고, 유산균이 아무리 많다고 홍보해도, 자신들마저 사다 먹는 김치를 누구에게 파느냐고 묻는다면 뭐라 얘기해야할 지 답답하고 우울한 김장철이다. 〈농협 중앙교육원 교수 2005년 7월 은펜상 수상〉

은펜칼럼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싣는 코너 입니다.

기고

유 순 남

'교육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한다.

전남도교육청에서 농촌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실시하는 '방과후 수업'을 나가면서부터 이 말의 의미를 새삼 느꼈다.

이름도 예쁜 하늘별 학교인 화순군 도암면'천태(天台)초등학교'.

이 학교를 나가기 전만 해도 시골의 작은 학교는 통합돼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전교생이 100명이 채 안 되는 학교에 교직원 수가 15명이라는 것은 교육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 같았다. 학생들도 친구 사귐의 폭이 좁고 긴장감이 적어 성적도 낮지 않겠냐라는 막연한 생각도 했다.

이같은 이유 등으로 이미 몇 개의 작은 학교를 통합하여 수업하는 군(郡)이 있는가 하면 어떤 면(面)은 초· 중을 합해서 중학교의 전문 선생님들이 초등학교의 특별과목 수업도 함께 담당하면서 교직원 수도 줄여서 운영하는 곳도 있다. '천태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적어 학생들 한명 한명이 주인공이 되는 학교다.

운동장에서 축구나 야구를 할 때면 학생 수가 적어 남·여학생들이 함께 팀을 꾸린다. 어느 누구도 빠지지 않는다. 체육 활동뿐만 아니다. 학예발표회 때도 연극이나 합창 등 모든 활동에서 남녀 구별이 없다. 전교생이 주인공이다.

특히 이 곳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도암의 역사와 문화'라는 책은 조금 특별하다.

선배 동문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들었는데, 화순군 도암면의 역사와 자연환경, 인물, 문화유산 등 그 지역의 어제와 오늘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이 책을 배우며 고장의 역사를 배우고 그 현장을 직접 둘러보기도 하한다. 유적들과 선인들의 훌륭한 얼을 본받는다는 살아있는 교육이지 않은가.

작아서 좋은 학교

지역 주민과 선배들이 모아둔 학교발전기금으로 체험 학습이라도 다녀오면 고스란히 CD로 담겨 학생들에게 전달된다.

직접 체험하는 교육은 그들이 어른이 된 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훌륭한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에서다.

체험 학습을 가능케한 선배들의 사랑 또한 후배들에게 대물림 되는 것이 당연하다. 학생 수가 적은 탓에 가능했던 교육일지 모른다. 또 교사·운영위원회·동문 선배들이 힘을 보태야 이뤄질 수 있는 교육이기도 하다.

분명한 것은 교육에 돈의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는 것이다.

〈천태초교 방과후 학습 교사〉

내년 대선 '선거부패' 고리 끊는 계기 삼아야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맘때면 송년모임으로 광주시내 상당수 식당은 북적대고 예나 지금이나 주고 받는 상부상조 공동체적 유대감이 어김없이 그 위력을 발휘한다. 주고 받는 '정(情)'문화는 정치적 관계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 연말연시 감사의 표시 등의 명목으로 정치인으로부터 금품,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는 선거법상 일년 열두달 상시 제한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표를 얻으려는 대가성이 다분한 기부행위는 정책선거를 가로막고 돈이 많이 드는 선거로 비리를 조장하여 유권자에게 그 폐해를 가져다주는 부정부패의 씨앗일뿐만 아니라 기부행위를 받은 경우 50배의 과태료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정치인으로부터 축·부의금이나 주례, 향응 등을 제공받지 말아야 하겠다.

특히 내년에는 대통령선거가 있다. 국가발흥의 기틀을 이룩할 수 있는 탄탄한 정치인을 뽑기 위해서는 더 이상 부패의 사슬이 뿌리내리게 할 수는 없다. 주고 받지 않는 기초적인 정치 기본기를 다져놓는다면 자질있는 정치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기회는 우리에게 쉽게 열릴 것이다.

온정에 이끌려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당선된 부패한 정치인이 과연 민간의 안녕유지와 행복증진을 가져다줄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김효경·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

공공 도서관 열람실내 음식물 반입금지 꼭 지켜져야

책도 보고 이런저런 정보도 얻을 겸 집에서 가까운 공공도서관을 자주 이용한다.

많은 자료와 넓고 쾌적한 열람실은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기에는 좋은 곳이 아닐 수 없다. 도서관 열람실 입구에는 쾌적한 분위기를 위해 커피나 음료 등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하지만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 두었음에도 몇몇 사람들은 아예 드러내 놓고 과자봉지를 뜯고 냄새를 풍기기 일쑤다.

과자를 먹다 보니 본의 아니게 주변 어린이들은 그 모습을 흘깃흘깃 보며 군침을 삼키는 경우까지 있다.

누구나 우리 모두를 위한 도서관이 깨끗하고 쾌적하기를 바란다.

물론 자발적인 참여가 안 된다면 약간의 강제적인 제재를 가해야겠지만, 그보다는 스스로 예의를 지키는 시민의식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도형·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사설

부패 관행 여전한 공직사회 각성해야

공공기관에서 금품·향응 제공 등 악성 부패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장 청렴하고 공정해야 할 검찰과 경찰 등 '힘있는 기관'과 교육기관의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국가청렴위원회가 19일 30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006년 청렴도 측정'을 실시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 중 80%에 달하는 기관에서 금품·향응 제공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원이나 인·허가, 단속규제 등 부패 취약 분야의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금품·향응 제공이 관행화되고 제공 액수도 커지는 등 악성 부패의 고착화 조짐까지 보였다.

공공기관의 부패는 경제와 정치, 사회 등 전 분야의 부패로 확산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지난달 국제투명성기구(TI) 가 발표한 국가별 청렴도에서 우리나라가 163개국 가운데 지난해보다 2단계 밀려난 42위 그친 것도 공공기관의 부패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공직사회의 부패는 구성원, 특히 기관장의 의지만 있으면 크게 줄일 수 있다. 지난 3년 간(2003~2005) 청렴도 최하위 도시에서 올해 청렴도 '우수' 도시로 탈바꿈한 목포시가 좋은 예다. 정종득 시장은 2006년을 '청렴의 해'로 정하고 '비리관련자 엄중 문책' 등 13개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고 부정부패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제정 등 다양한 시책을 강력히 추진해 목포시를 청렴도시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공직사회의 부패는 연고·온정주의 문화와 공과 사를 구분 못 하는 패거리 문화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이 같은 부패 친화적인 문화를 과감히 타파하고 업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부패 척결과 청렴도 제고는 선진국이 되기 위한 최고의 덕목이자 필수 요인이다. 부패 공직자는 엄정한 처벌로 다스릴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공직자 개개인의 혁신적인 의식변화가 시급하다.

문화도시조성위 '기획단' 긍정 검토를

송재구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이 조성위원회에 집행기능을 담당할 '기획단' 설치를 공식화하고 나섰다. 송 위원장은 '기획단' 설치를 골자로 하는 아시아문화도시 특별법 시행령안을 마련,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문화관광부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위원장직을 걸고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혀 주목된다.

기획단 설치는 문화중심도시 추진 주체문제와 직결된다. 추진 주체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문화관광부는 산하에 추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고 광주시도 별도의 기구를 두고 있다. 추진 주체가 문화관광부인지, 광주시인지, 대통령 직속 심의기구인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인지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다.

송 위원장은 조성위원회가 아무런 기능이나 역할 없이 문화관광부의 구상대로 심의만 하는 '들러리' 역할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한다. 문화관광부 추진 기획단의 규모를 축소하고 조성위원회가 집행기능을 가져야 광주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할 수 있다는 논리다.

광주문화도시 조성사업은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개념부터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사이에서 혼란이 있었고 조직 내부의 편가르기와 상호 비방 등도 적지 않았다. 지난달 송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건전한 문화를 꿈꾸는 문화예술인연대' 명의의 성명서가 대표적이다.

지역사회는 송 위원장의 논리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7대 문화지구 조성계획과 문화전당의 기능이 현실과 동떨어진 상태에서 조성위원회가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조성위 기획단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다. 주도권 다툼보다는 추진주체와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방귀세 논란

뉴질랜드에서 '가축 방귀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03년 가축들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방귀세'를 도입하려다 농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이후부터다.

2005년에는 소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이른바 '소 방귀세'를 걷으려다 소를 키우는 목축업자들의 반발을 샀다. 소가 방귀 때문에 세금까지 낼 뻔했던 이유는 바로 소의 방귀와 트림 속에 들어있다는 메탄가스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는 데서다.

실제 '소 방귀세' 논란이 한창이던 2005년 당시 국내 한 방송사가 소와 지구환경에 대한 특집을 통해 실험을 한 결과, 소만 있는 공간에서 산소가 점차 줄어들고 메탄가스는 계속 증가했다. 또 소가 하루 방출하는 메탄가스의 양은 약 250ℓ 로, 자동차에서 하루 종일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소가 유해가스를 방출하는 이유를 소의 위에서 일어나는 활동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초식동물인 소는 많은 양의 풀을 소화시키기 위해 위 속 미생물의 도움을 받는데, 이 미생물의 활동으로 메탄가스가 생성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뉴질랜드 신문들까지 소의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자동차보다 훨씬 더 심하다고 보도하고 나섰다. 유엔 식량기구(FAO)의 보고서를 인용, 소가 지구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긴급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삼림파괴, 수질 및 공기 오염 등을 유발하는 환경 파괴의 가장 큰 주범으로 소가 지목됐다고 강조했다. 한 국회의원도 "가축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다"고 강조, 뉴질랜드에서 또 한번 '소 방귀세' 논란이 일 것임을 시사했다.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논란이긴 하나 그 책임 소재를 인간이 아닌 소에게만 돌리려는 것 같아 왠지 씁쓸함이 앞선다.

/김우성 경제부장wskim@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FAX 222-4918〉 편 집 부 2200-629 정 치 부 2200-616 경 제 부 2200-617 사 회 1 부 2200-618 〈F A X 222-4267〉
사 회 2 부 2200-619 〈F A X 227-0118〉 문화생활부 2200-626 여론매체부 2200-628 체 육 팀 2200-627 사 진 부 2200-690 조 사 부 2200-570
총 무 부 2200-511 〈F A X 222-8005〉 광 고 국 2200-521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사 업 2 부 2200-552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판 매 부 2200-551 〈F A 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